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서울 삼성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와 역점 추진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李당선인, 신년 기자회견 각 부문별 대책

올 성장 6% 달성 목표

경제 성장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대선 기간 내세웠던 7% 성장률 달성 목표와 관련, “금년에 7%를 달성할 수는 없지만 6%를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하고 “그러나 결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재정지출을 해 부작용을 일으키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또 “7% 성장률을 예측한 것은 임기 5년, 길게는 10년 경제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내놓은 비전”이라며 “금년에는 정부 예산이 확정되었고 4월 총선도 있으며 2월 취임하고 해서 금년도 경제운영에 새 정부가 100% 관장하기는 힘들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규제를 풀고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 본고사 하지 않을 것

교육정책

이 당선인은 대학입시 자율화 정책과 관련, “대학에 자율을 주더라도 스스로 본고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일부 언론에서 (자율화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본고사 실시 등을 우려하지만 깊이 보면 대학가는 것이 쉬워진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당선인은 “내신과 수능 때문에 학생들이 고생한다. 내신이 문제

되니까 내신을 살리려고 수능등급제를 도입했고, 수능등급제를 하나까 변별력이 없어져 논술을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수능과목을 줄여 아이들을 수능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사교육비도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율형 사립고의 부작용 우려에 대해 이 당선인은 “자율형 사립고가 생기면 또 다른 과외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대한민국에는 수요자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용정부’ 통한 경제살리기 매진

■李당선인 신년 기자회견 뭉 댄있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14일 신년 기자회견은 국회와 국민 앞에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와 역점 추진과제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대승적 차원의 협조와 협력을 당부한 것으로 집약된다.

이 당선인이 밝힌 새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는 무엇보다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경제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실용정부’ 구상이나 규제개혁, 교육개혁 등 중점 추진과제들이 모두 경제살리기에 맞물려 있다. “국익에 도움이 되고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면 어디라도 달려야 한다는 것이 이 당선인의 메시지가 이 같은 기조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당선인은 우선 나라 안팎의 여

러 요인으로 인해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경제 현실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위기극복을 위한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이 당선인은 “세계 경제가 곳곳에서 적신호를 보이고 있고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환율과 금리, 물가도 불안해 졌다”면서 “여건이 어려울수록 마음을 다잡고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 해법으로는 급진적 변화가 아니라 ‘화합속의 안정적 변화’를 추구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관치를 줄이고 민간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이 당선인의 구상이다.

이 당선인은 가장 먼저 정부조직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관치 경제로는 더 이상 글로벌 경쟁시대에

살아남지 못하는 만큼 ‘일 중심’의 실용정부로 정부조직을 대대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

“정부조직의 균형을 빼고 방만한 조직에 나사를 죄고 중복적인 기능을 과감하게 통일해야 한다”는 이 당선인의 말은 발표가 임박한 정부조직 개편안의 방향을 가늠케 한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이 당선인은 “국회의 협력 없이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들께 간곡히 호소한다”며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협과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외교 및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이 당선인은 ‘안정’과 ‘공동번영’을 강조했다. 내부 여건이 아무리 좋아도 외부 환경이 불안할 경우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해수부 해체 반대 들끓는 민심

“국가 미래 전략·국익 포기 행위”

엑스포 성공 개최 위해 반드시 필요

주무부처 폐지엔 BIE와 협조 무너져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폐지를 반대하는 여론이 여수를 비롯 전국 해안도시로 확산하고 있는 것은, 이들 지역이 주요 성장동력으로 삼아 온 해양 관련 산업이 자칫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2012년 세계박람회를 유치한 여수의 경우, 박람회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폐지된다면 4년여밖에 남지않은 박람회 개최 준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기존 주무부처가 폐지되고 새로운 부서가 박람회 준비를 맡게 된다면 국제박람회기구(BIE)와의 협조관계가 무너지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여수프로젝트(해양과 연안의 위기관리 개도국 지원프로그램)도 이행과 면담을 통해 해냈다”고 강력한 사업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연합뉴스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특별법 제정과 조직위원회를 하루빨리 설립, 정상가동에 들어가야 할 시점에서 해수부 통폐합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바다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만큼 해수부 해체는 국가의 미래 전략과 국익을 포기하는 것이며, 바다를 터전으로 삼고 있는 지역의 희망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2012세계박람회 여수시 준비위원회와 해수부 해체 반대 여수시민모임, 남해안권공동발전 민간협의회, 순천·광양상공회의소 등 지역 해양수산 관련단체들은 이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에 해수부 폐지 반대 건의문을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갖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해 극적으로 유치된 2012년 여수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행사를 전담하는 해수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수박람회는 남해안권인 전남·부산·경남·제주도의 해양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해수부를 해체한다는 것은 시대 착오적 발상”이라며 “특히 EEZ문제, 한·중·일 어업협정 등의 체결, WTO와 FTA 타결 등으로 수산물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는 시기에 해수부가 없다면 수산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여수시는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12월2일 여수세계박람회 홍보관을 방문했을 때 ‘여수 EXPO 성공적 개최로 여수뿐 아니라 호남과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기원하고, 적극적 지원을 하겠습니다’라고 적은 방문록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기업 지방투자 더 많은 혜택

지방 경제

이 당선인은 수도권 규제 완화 및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한 복안과 관련, “신 정부는 당장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어느 한쪽을 규제하는 것 보다는, 지방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기업투자와 혜택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또 “지방에 광역경제권을 설정하고 수도권 못지 않은 인프라를 정부가 적극 하겠다는 거다. 기업이 지방에 투자해도 땅값이 비싼 수도권보다 지방이 좋겠다고 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덧붙였다. 이 당선인은 이어 “당면 요구사항을 검토,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해 새 투자를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북핵포기 도움엔 정상회담

남북정책

이 당선인은 차기정부에서의 남북 정상회담 개최문제와 관련, “만일 남북 정상회담이 북한이 핵을 포기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남북 정상)이 언제나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또 “격식을 따져서 임기 중 한번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만

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그러면서 “이 다음에 만난다면 장소는 우리 쪽에서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남북 정상회담 후속조치와 관련, 이 당선인은 “남북이 합의한 사업에 대해 타당성이나 재정의 부당성, 국민적 합의 등의 관점에서 서로 납득할 수 있는 합의사항을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부세 조정 하반기 검토

부동산정책

이 당선인은 종합부동산세 과표기준의 상향 조정 문제와 관련, “중부세는 부동산 경기를 파악해 가면서 금년 하반기에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또 집값 안정대책과 관련, “주택거래가 너무 죽어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지금의 주택가격,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너무 높다고 생각하며 이 이상 오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주택가격과 부동산 투기는 안정시키는 정책을 쓰면서도 거래는 활성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지금 다소 안정된 것 같지만 주택거래가 중단돼 지방경제가 어렵다. 특히 미분양 주택이 지방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적 합의 매우 중요

한반도 운하

이 당선인은 대운하 공약과 관련, “대운하 사업은 100% 민자사업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라며 “민간의 손에 있으며 입장이 있었지만 4천원이 넘는 설득과 면담을 통해 해냈다”고 강력한 사업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연합뉴스

때 사업 타당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 등 완벽한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또 “국민적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청계천 사업을 추진할 때도 많은 반대 입장이 있었지만 4천원이 넘는 설득과 면담을 통해 해냈다”고 강력한 사업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연합뉴스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수세기소라·세기보청기

1588-8400 / 010-722-0100

10225300-0100